

## 신문의 자주성

신문의 날에 즈음하여

한국의 신흥 사업 중에 신문 기업만큼이나 거창한 자이언트 비지니스도 드물 것이다. 사회 여론에 끼치는 영향으로 보나 그 명분, 기업으로서의 크기로 보나 어떤 산업체 못지 않게 비대하여지고 있다. 해마다 신문의 날이 되면 이 자이언트들이 한결 같이 새로운 표어를 내걸고 자아 반성과 사명을 다짐하면서 행사를 치루곤 한다. 열세돌을 맞이하는 금년의 신문의 날에는 <신문의 자주성>이라는 표어를 내걸었다. 얼핏 보기에는 너무나도 진부하고 당연한 표어를 새삼 내걸지 않을 수 없는 신문인들의 고충과 현실적인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축할 수가 있는 것이다.

현대 산업의 특징을 그 협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면 신문이라는 기업은 특별히 그 복잡한 기업 구조와 언론 창달이라는 입장에서 치밀하고도 지혜로운 협동 기업 정신이 요청된다. 그러나 과거의 한국 신문 역사를 살펴보면 신문은 언제나 항거와 저항, 비판의 정신을 터전으로 하며 협동보다도 투쟁을 앞세워 왔던 것이다. 일제 시대부터의 한국의 민족 역사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실도 수긍할 만하다. 그러나 정년에 접어든 한국 신문은 이제 정부 미디어 자체 그리고 대중이라는 세 요소의 삼각 관계를 두루 살펴 가면서 어느 선까지의 항거와 비판에 머물러서 미디어 자체의 문제, 독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언론의 자유, 독립, 자주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언론 기관 자체의 질적 향상과 또 대중의 권익을 존중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한다는 면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여기서 흔히 우리는 한국 신문들이 항거와 비판의 정신이 왕성하면서도 때로는 신문의 횡포라는 현상으로 독자의 빈축을 사는 경향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신문의 자주성보다 앞서서 신문의 책임성이라는 윤리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월버·슈람은 신문 보도의 적관성이나 공정성의 밑바닥에는 보도의 책임적인 해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 책임설을 말한 바도 있거니와 신문의 책임은 정부와 신문, 그리고 독자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이라고 갈파하였다.

언론의 자유나 신문의 자주성에는 이상 세 가지 요소가 관련되어 있음을 살려야 할 것이다. 어떤 역사가는 말하기를 서구의 신문은 자유를 쟁취하는데 2백 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지만 책임적인 신문이 되어 본 것은 불과 1~20 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따르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부는 신문을 규제하려 함에 있어서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협>을 어디에다가 선을 긋는가 하는 문제이다. 일차 대전 중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전 선동으로 체포된 샌크 사건을 중심으로 한 홉스 판사의 이론은 지난 세기부터 세계 언론 문제에 파문을 던져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과 같은 세계 반공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국가 보안법으로 이적 행위를 규제하는 나라에서 과연 어느 선에서 이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라인을 제정하는가 하는

것이 신문과 정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이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정부 당국의 자의가 그대로 통하는 위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위협>은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신문 자체의 규제 문제일 것이다. 신문 윤리 위원회가 있어서 신문 보도의 정확성과 명예 훼손의 방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공적인 보도를 하는 때에, 그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따르기 쉽다. 이것은 신문 자체가 언제나 경계해야 할 문제인 동시에 보도 담당자의 철저한 직업화를 통해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대중을 위한 봉사에는 엄격한 훈련과 직업적인 교육이 있어야만 무엇을 공식적으로 말해도 좋고 무엇을 말하면 안 된다는 분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문화, 종교의 특수 교육이나 교양을 갖추지 않고서 어떻게 책임적인 보도나 논설을 다룰 수가 있겠는가?

끝으로 신문의 독자의 문제이다. 독자들의 투고난을 설치해서 독자의 소리를 신문에 반영시키는 기회가 열려져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에서 흔히 말하는 피드백의 과정이요, 이 과정이 있어야만 진정한 쌍방 전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신문의 자주성은 신문 산업을 담당할 사람들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신문, 독자 이 삼자의 정상적인 삼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함께 나누어져야 할 책임인 것이다. 이 책임 윤리가 확립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언론의 자주성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